

주는 시늉하다 빼앗은 최저 임금, 줄이는 시늉하다 늘리려는 노동시간 **노동 존중 한다더니** **조삼모사 노동 공격**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가 우스우냐?



사진 조준진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8~9면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개악
중단하라

2, 9, 16면

위태로운
한국 경제

14면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 추진

4면

미국 중간선거
반(反)트럼프 정서와
민주사회주의당의 부상

12면

브라질 대선
극우파의 당선과 저항

10~11면

학교 비정규직 투쟁 2면

잡월드 파업 3면

서울대병원 파업 7면

사기로 드러난 공공 정규직화 3면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와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 수준 보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투쟁으로 근속수당이 인상됐지만, 올해 임금도 정규직 대비 67퍼센트(1~20년 차 평균)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아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커진다. 상여금과 명절 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에서도 차별 받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은 연봉(기본급과 공통수당)이 2500만 원 이하이다. 방학 중에 일하지 않는 노동자가 70퍼센트에 달하는데, 이들의 연봉(1년 차 기준)은 19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저임금을 개선하려면 최저임금 수준인 기본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 이하 연대회의)는 2018년 임금 집단교섭에서 전년 대비 5퍼센트 임금 인상과 근속수당 5000원 인상, 근속수당가산금 신설(연차 별 5만~13만 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요구들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두 달 가까이 교섭에 아예 불참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다수인데도 교육청들은 올해 공무원



줬다 뺏기식 최저임금 개악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인상률(2.6퍼센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교육청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발맞춰,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인 교통비 6만 원을 내년 기본급 인상액 10만 원에 포함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내년 임금 인상은 4만 원에 불과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월 17만 원 가량에 한참 못 미친다.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 개악 당시 정부와 여당은 저임금 노동자(연봉 2500만 원 이하)에게는 불이익

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임금껏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책임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분개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진보교육감 10명이 선거 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책협약을 맺어 놓고는, 취임 초부터 외면해 왔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섭에서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많이 됐다”며 “올해는 물론 향후에도 인건비 부담과 예산 부담으로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돈이 없지 않다. 교육청들의

내년 예산은 정부 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 2000억 원 증액돼 사상 최대이다. 정부와 교육청 모두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의지가 없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파업 찬반 투표는 92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율로 가결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1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상경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와 교육청들이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하순 경 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0년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매해 투쟁을 벌여 왔다. 그 결과 2011년 정규직 대비 47퍼센트인 임금을 그나마 지금 수준(67퍼센트)으로 끌어 올렸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내내 가장 앞장서 싸워 왔다. 무더기 정규직 전환 제외에 항의하고 차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그래서 해고를 막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번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을 벌인다면,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신정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와 같은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내외국인 등의 구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기업의 지불능력’ 운운하면서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이 어려우면, 저임금 노동자들조차 최저임금을 다 받으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13.5%) 이상인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1/2만 적용”

사용자 측이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2019년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안>의 내용 중 일부다. 최



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들의 비율(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저임금 업종의 노동자들에게는 인상률의 절반만 올려줘도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2004만 3000명) 중 월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노동자가 38.2 퍼센트로 760만 명(이중 월 100만 원 미만은 196만여 명)에 달한다. 직종별 통계를

보면 청소, 경비, 음식점과 같은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이 모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

결국 차등 적용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5인 이하’, ‘영세 사업장’, ‘이주노동자’ 등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누르는 파렴치한 짓이다.

요컨대, 경제위기 심화 속에서 또다시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용(인건비) 절감 시도 국회는 이미 이에 호응하고 있다. 7월 이후 보수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3개나 발의돼 있다. 법안을 다룰 환노위 위원장은 직접 개악안 중 하나를 대표발의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등 적용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와 여당의 분위기도 심상찮다. 10월 초 경제부총리 김동연과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국회에 출석해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0월 17일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당정협의에서도 ‘차등 적용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둬들인 최저 임금 개악으로 사용자들이 과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만이 아니다. 차등 적용이 관철되면, 사용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도 안올려 주는 마당에”라며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자들에게 임금 동결이나 인상 자제를 강요하기 더욱 수월해 질 것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투쟁이 저임금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 계급에게도 중요한 이유다.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그 댓가를 노동자들이 지불하게끔 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는 더욱 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과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월 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하고 압박했다. 노동

조건 후퇴(이른바 양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경각심을 갖고 이런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미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원상 회복도 필요하다. 지난 봄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월급 감소가 없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 내에서 ‘당장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원상 회복은 어려워’니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투자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경제 위기가 심화할수록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노동자들을 향한 양보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내고, 빼앗긴 최저임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한층 더 강력한 투쟁으로 ‘약자가 아님’을 몸소 보여 주어야 한다.

장우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약속처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사기였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체계 표준모델(정부안)”(이하 표준모델 안)을 만들었다. 내용의 핵심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대다수에게 최하위 직무를 부여해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저임금을 고착화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다며 최소한의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개선을 약속했지만, 최저임금 삭감 개악으로 이조차 사라질 판이다.

최근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에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들에 내려보냈다. 일부 공공기관들이 퇴직금 누진제 적용을 고려하는 것은 그만큼 전환자 처우 개선이 미미하다는 것인데, 그조차 과도하다며 말리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 전환자들은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청소·경비·시설 노동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시급 9211원)을 받다가, 전환 후에 오히려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 수준으로 깎였다. 국민연금 공단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 중 일부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정규직화 한다더니 만년 저임금 강요 9·28 공공운수노조 총력 투쟁 대회

처우 개선과 차별 중단을 위해 정규직화를 요구해 온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요컨대, 전환자들의 임금·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심지어 일부 후퇴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요구하며 투쟁하는 이유이다.

표준임금모델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정규직 전환자 임금체계 관련 안내> 공

문을 공공기관들에 내려보냈다. 여기에는 철도를 비롯해 여러 공공기관에서 도입된 다양한 형태의 직무급제가 소개됐다.

그동안 정부는 자신들이 표준모델안을 만들지만 했지 공표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해 왔다. 그러나 이미 공공기관들이 정부안을 토대로 직무급제 모델을 도입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주요 사례’가 담긴 공문을 내린 것도 사실상 표준모델안 도입을 적극 주문하는 것이다.

공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무기계약직뿐 아니라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이 모델의 적용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 대다수는 최하 직무등급에 해당하고,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정부가 말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공문에는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해 준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도 주요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이를 보면 미화, 주차, 경비, 식당, 콜센터 업무는 최하 직무 등급에 속하고 최저임금으로 시작해 18년이 지나 최고 단계에 도달해도 기본급은 고작 27만 3000원 오른다. 정부가 제시한 표준모델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보건의료노조 집행부가 이 가이드라인이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 회피일 뿐이다. 정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원

자회사 저지 투쟁의 초점이 된 한국잡월드 파업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10월 19일부터 사측의 자회사 강행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직업 체험 강사들은 전원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최근 노동부와 노사 양측이 몇 차례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자회사를 고집했다.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사측이 이미 강사 직군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꽤 상세하게 검토했던 것을 보면 직접고용이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온갖 비민주적 방식을 동원해 자회사 설립을 밀어붙였다.

사측은 11월 2일 자회사 채용 공고를 내고 8일까지 지원서를 받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공개채용”으로 결원을 채울 것이라며 사실상 해고를 협박했다.

격분한 노동자들은 자회사 채용 지원서 대신에 직접고용 원서를 들고 이사장실로 향했다. 이사장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 눌러



잡월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잡월드 본사에서 점거 농성하는 노동자들

앉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우리는 정규직 직원증 받고 복귀하겠다. 그전에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점거 농성

노동자들이 이토록 자회사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제시한 “상시지속 업무 직접고용”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직업 체험 강사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한다. 우리가 없으면 잡월드는 운영될 수 없다.”

사측이 제시한 자회사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자회사는 용역회사와 다를 바 없다”는 노동자들의 말이 맞다. 사측은 처우 개선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고 자회사 방안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문제의 일부다. 노동자들은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자회사 방안은 사실상 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정책이다.

자회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파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가스공사와 5개 발전사, 마사회, 울산항만공사, 도로공사 등 자회사 방안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은 잡월드 투쟁을 주시하며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정부도 여기서 밀리면 자회사 추진 정책 자체가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완강하다. <조선일보>가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을 비난하고 나선 것도 잡월드 투쟁의 정치적 중요성을 보여 준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한국잡월드 노사를 중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재안은 노동자들의 바람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사측은 자회사 추진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경사노위 중재안은 기껏해야 일단 자회사를 수용하고 처우 개선 등을 추후

논의하는 것일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동안 차별과 열악한 처우에도 묵묵히 일 해 온 잡월드 노동자들은 직접고용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게다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보면, 자회사를 일단 수용한 뒤 직접 고용 전환을 기대하기도 결코 녹록치 않다.

그동안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투쟁을 말리며 내놓은 중재안들은 결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못했다. 성동조선과 한국타이어에서 노동자들은 수년간의 무급 휴직과 매각 수용 등 끔찍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약화되고 사기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불만족스러운 경사노위 중재에 기멸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이 투쟁이 자회사 반대 투쟁의 최전선인만큼, 적극 엄호하며 투쟁 확대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자회사 강행을 막고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이정원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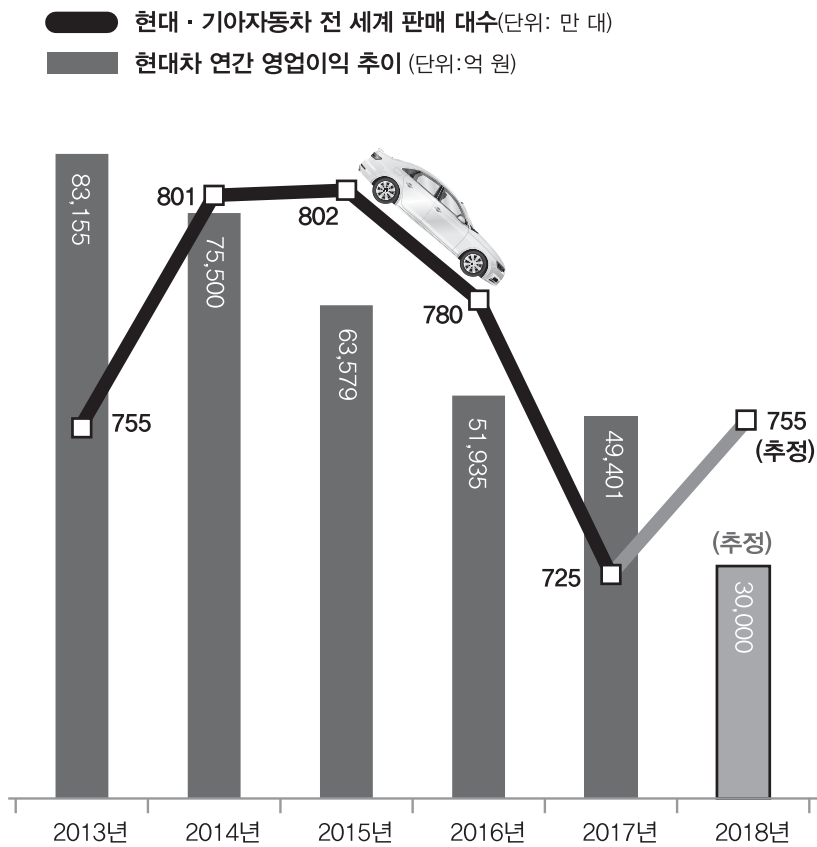
강동훈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게 3조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에게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76퍼센트나 줄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과 기업주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고임금을 탓하며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반값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 추진하며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압박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정체와 과잉 생산 위기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이 급락한 것은 일회적 비용을 반영했기 때문이지만, 현대차의 수익성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해 왔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만 위기인 것도 아니다. 최근 폭스바겐, 다임러, 르노, PSA(푸조·시트로엥) 같은 대형 자동차 업체들도 모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거나 예고하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그동안 급성장해 온 세계 자동차 시장이 최근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 이후 급성장하며 자동차 판매 증가를 이끌어 온 중국까지 정체하고 있다. 중국의 높은 부채와 무역 전쟁 등이 중국 소비에 타격을 줬. 올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고작 1.2퍼센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가 정체하면서 자동차 기업들의 ‘과잉 설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기업들은 또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올해 한국에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한국GM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법인 분리 절차를 밟고 있는 GM은 북미 지역에서 1만 8000명 해고를 추진 중이다. 포드도 유럽에서 2만 4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도 과잉 설비가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다. 현재 현대·기아차의 전 세계 생산능력은 908만 대인데, 내년에 기아차 인도공장이 완공되면 940만 대로 늘어난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올해 판매량은 75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차는 2016~17년에도 중국 공장을 증설해, 현대·기아차의 중국 생산능력은 270만 대나 된다. 그러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 등으로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은 114만 대로 36퍼센트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중국 공장 가동률은 40~50퍼센트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현대차가 중국 공장을 증설할 때 한국의 부품회사들도 중국 설비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현대·기아차의 판매가 급감하자 부품회사들의 가동률도 급락했다.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줄도산’ 위험은 바로 중국에서 현대·기아차의 판매 부진 때문이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 위기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과잉 생산 위기가 원인이다. 따라서 이윤 경쟁을 위해 생산 확대를 결정한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노동자들의 책임은 전혀 없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압력

한편,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것도 자동차 산업의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앞서 봤듯이, 현대·기아차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정체뿐 아니라 사드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갈등의 여파로 판매가 급감했다. 사드 배치는 미중의 제국주의 경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도 한국 자동차 기업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퍼센트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일본·독일·한국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전쟁이

단지 중국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미국 정부가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보여 줬다.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25퍼센트 관세를 물리더라도 멕시코·캐나다에는 260만 대씩의 무관세 쿼터를 보장하기로 했는데, 이는 결국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물량은 104만 대다. 한국 자동차 생산량의 4분의 1가량이고, 수출량(250만 대)의 40퍼센트나 된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물리면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22.7퍼센트(50만~60만 대)나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이 정체하자 각국 정부는 보호무역 강화로 다른 나라에 위기를 떠넘기는 ‘근린국뺨화(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각국 지배자들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보호무역정책 강화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자국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

한국 노동자들의 고임금·저생산성이 문제라고?

최근 한국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보수 언론들과 기업주들은 모두 한국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저생산성이 문제라며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이 제시하는 다른 나라와의 임금 비교에는 노동시간과 같은 기본 정보조차 일절 없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훨씬 길고, 따라서 연장근로와 특근 수당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크게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보수 언론들에는 한국 자동차 공장의 차량 1대당 생산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길다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교도 각 공장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애써 무

시하는 흑색선전일 뿐이다.

예를 들어 어느 공장에서 대형 트럭을 생산한다면 소형 승용차 공장보다 생산 시간이 더 걸릴 공산이 크다. 또, 모듈화된 부품을 받아 조립만 하는 공장이 있는 반면, 그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조립까지 하는 공장이 있을 수도 있다. 생산 시간이 길다고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5~6년 전인 2012~2013년에도 보수 언론들과 기업주들은 한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저생산성을 비난했다. 그러나 그때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450만 대, 수출은 300만 대가 넘어 역대 최대였고, 현대·기아차는 최고의 수익을 거두며 한국 주식시장을 이끈 바 있다.

한국 자동차 노동자들이 비효율적이라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는가?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삭감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동차 산업 위기를 맞아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기아차 노동자의 반값 임금(약 3500만 원)으로 1000명 정도를 고용하는 소형차 공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즉, 문재인 정부도 한국 노동자들의 고임금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11월 5일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초당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민정 대타협’을 표방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이미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건과 임금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투자 유치 협상 과정에서는 초임 연봉을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2100만 원)을 주려고 계획했다. 결국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 파트너로 끌어들이던 한국노총 광주본부조차 반발하자 최저임금 수준의 초임 얘기는 들어갔다. 그러나 이제 현대차는 5년간 단체협약 유예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고, 최소 물량 배정도 약속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한다.

현대차 사측은 저임금이 확실하고, 자신들이 원하면 언제든 폐쇄할 수 있어야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저질 일자리가 확대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노조를 비롯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옳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중동 같은 우파 언론은 물론이고 <한겨레>와 <경향신문> 같은 중도 진보 언론들도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한 민주노총을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즉, 이들 모두는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면,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의 실제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임금 양보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했다. 폭스바겐 노조는 1993년에 고용을 지키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이래로 거듭 임금·근무체계 개악 등에 합의했지만, 2006년에는 1만 3000명이 해고됐고, 2008년에는 비정규직 1만 6000여 명이 해고됐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얻어내려는 게 무엇인지도 보여 준다. 이들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운운했지만, 결국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회적 대화를 이용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와 같은 사회적 대화에 미련을 갖지 말고, 문재인인의 노동 개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 폐기, 저질 일자리 확대 추진 등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을 고무해야 한다.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불완전취업자,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포함한 수치)은 더 심각해, 지난해 9월 21.5퍼센트에서 올해 9월엔 22.7퍼센트로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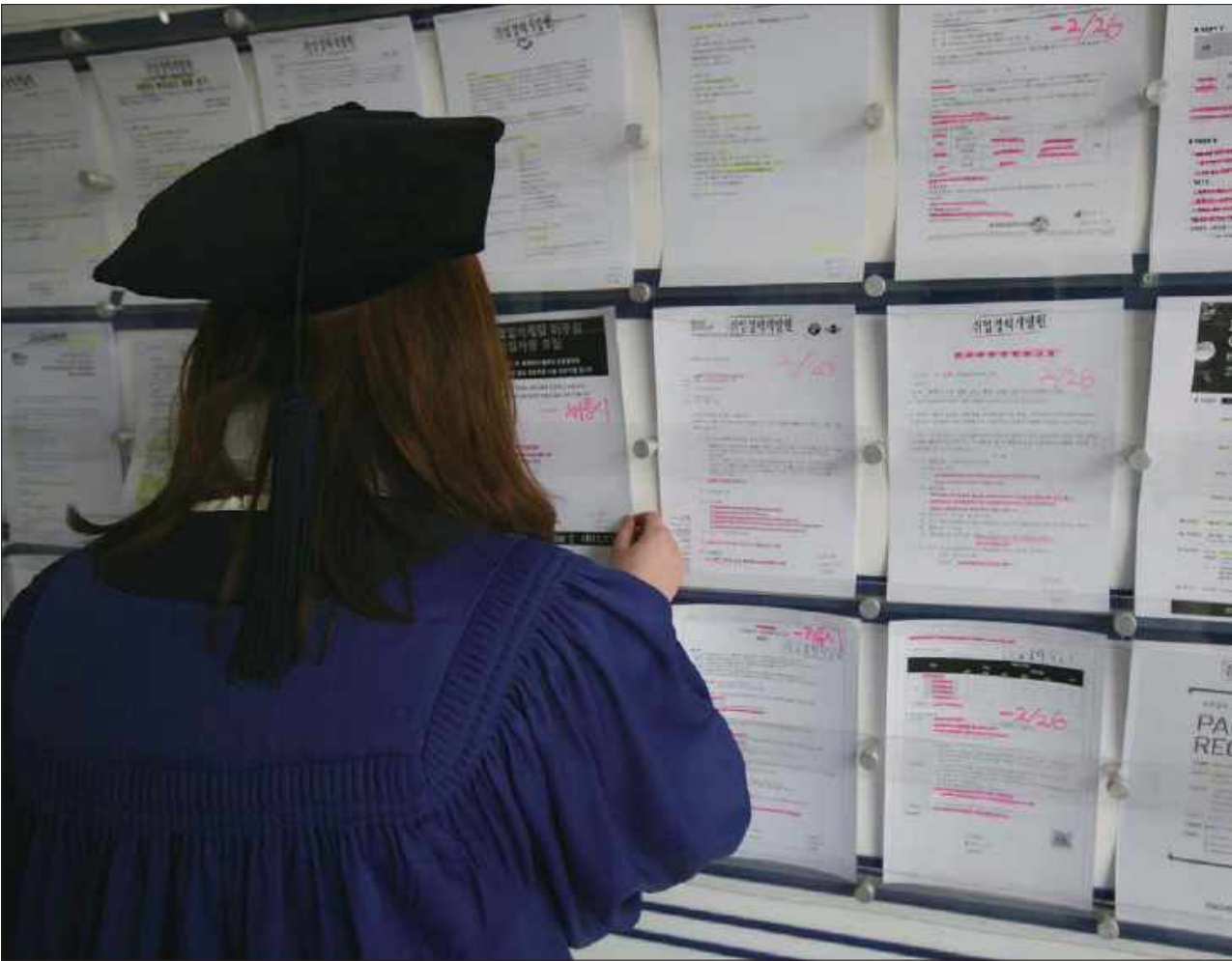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고용 세습’ 운운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청년 ‘취준생’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비난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이런 비방은 근거가 없다. 게다가 지난 우파 정부 시절의 행태를 보면 이들의 주장은 위선적이기 짝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고,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밀어붙여 청년층 고용 악화에 한 몫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오세훈이 시장이던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인력을 대폭 줄였다.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기 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각각 정원의 11퍼센트(1134명), 10퍼센트(690명)를 줄였다. 바로 이런 인력 감축이 외주화를 동반했고,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이다.

삼십

이런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비정규직 간접고용 등에 시달리는 청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하라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를 늘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탓, 청년들의 눈높이나 모험정신 부족 탓만 하고 있다.

년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이 진짜로 비판 받아야 할 지점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으로 인해 늘어나는 편향은 일자리는 30만 개 수준인데, 그마저도 대부분 집권 말기에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라 집행될지 의심스럽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더니 차별을 유지하는 ‘자회사’ 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실업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문재인 정부는 저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 일시적으로 고용률 지표를 올리려 한다.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인턴 등 단기 일자리

를 5만 9000개 가량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 중에는 근무기간이 1일에서 2주밖에 안 되는 ‘알바’도 많다. 우파 정부가 ‘삼십’ 사업, 청년인턴 확대를 기만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책임을 방기하면서,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3·15 청년일자리 대책)을 두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초점을 민간 기업 지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하면 연봉의 3분의 1을 지원해 준다는 고용장려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 지원금을 받으려고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5~7월 전국 중소기업 20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17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올해 고용장려금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선호 쏠림”이 문제라며 중소기업 취직 유도 정책들도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을 지

원해 준다지만, 액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마저도 3~5년 후엔 끊긴다. 이직을 하면 재가입도 불가능하다. 노동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버티라는 식이다.

캥거루족

청년 창업 지원도 일자리 대책이 못된다. 정부는 “모험정신” 운운하며 청년 창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30세 미만 청년 창업의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은 겨우 15.9퍼센트다(통계청). 고용원이 없거나 매우 적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은 점점 악화돼 전반적으로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창업을 하라고 떠미는 것은 낙하산도 없이 뛰어내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를 타하며 노동유연화를 강요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노동유연화를 추진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된 사례는 없다. 존재하던 좋은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청년들이 구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일 뿐이다.

그러므로 기존 노동자들의 양보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증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구 내의 청년과 장년 중 한 쪽의 조건이 악화되면 가구 구성원 전체의 부담이 증가된다. 경제 위기로 청년들의 분가 비중이 계속 낮아져 부모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한 사례다. 2010년 기준 30~34세 청년의 ‘캥거루족’ 비율은 2010년의 갑절이 넘는다.

청년 실업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국가가 나서서 질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내걸 때 청년 실업자와 기존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다.

양효영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안마 노동자 판저테이 씨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판저테이 씨는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정부의 단속이 낡은 비극이다.

최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뎠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나 단속이 없었다면 판저테이 씨가 위험하게 창문을 넘어 달아날 이유 자체가 없었다. 그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간 사냥’식 단속 과정에서 죽

거나 다쳤다.

경찰이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한 것과 비교해도 명백한 이중잣대다. 이주민의 고의 없는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경찰 단속으로 이주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희생양

문재인 정부는 이주노동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10월 1일부터 건설업을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라며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승강장 전광판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신고하라는 광고까지 한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

의 한 원인이 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면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업, 한국GM, 금호타이어 등의 구조조정 과정은 정부와 기업 주들이야말로 ‘일자리 잠식’의 주범임을 보여 줬다. 게다가 정부는 엉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높은 원성을 사고 있다. 건설업 고용불안의 원인도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73퍼센트나 되고 그조차 대부분 임시·일용직인 데 있다. 이로 부터 이득을 얻는 것은 기업주들이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은 일자리 수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일자리 수는 경제 상황, 사용자들의 공격에 맞서 저항할 노동자들의 힘과 조직에 크게 좌우된다. 이주노동자 배척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노동자들의 힘과 조직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해롭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같이 이주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며 실업과 복지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떠넘기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투사들은 자신의 노동조합 안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에 맞서고 연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차별 부추기는 정부

최근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강력·폭력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886명을 검거했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인 범죄의 세력화를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주민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을 부추기는 것이다. 하지만 한 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 기준).

또한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주요 검거 사례’에 피의자가 내국인인 경우도 포함돼 있다. 악의적인 부풀리기이다.

정부는 부풀리기와 왜곡을 통해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임준형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정진희

올해 6월 문재인 정부는 ‘유연근로 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최근 문재인은 여야 4당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더니 몇 개월도 안 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존중’ 약속뿐 아니라 ‘성평등 실현’ 약속도 내팽개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 노동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여성들을 울며 겨자 먹기식 사직·독박 육아에 내몰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및 유연근무 활성화’를 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자신이 야당 시절 박근혜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비판해 놓고서 말이다.

유연근무제는 흔히 ‘일-가정 양립’ 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로 불린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직장과 가족에서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고들 한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 워낙 흔하다 보니 자신의 필요에 맞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들이 많다. 특히 자녀가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절실한 요구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들이 도입하는 ‘유연근무’가 이런 노동계급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과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유연성’은 서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 작업장에서 노동을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들에게 있다.

현실에서 유연근무제는 대부분 착취율을 높이곤 도입된다. 올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많은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한 것이 이런 맥락이다. 인력



여성 노동자들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원한다 10월 20일 학교비정규직 초등돌봄 노동자대회

충원을 회피하며 임금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유연근무를 통해 일하는 부모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는 별로 없다. 노동강도가 강화되거나 임금이 삭감돼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흔하다.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정책도 노동계급 여성이 아니라 지배계급을 위한 일석이조 대책이다. 보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

으면서 여성 노동력을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이윤을 회복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의 핵심적인 여성 일자리 대책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까닭이다.

임금노동자 중 시간제 노동자는 2017년 8월 266만명(13.3퍼센트)으로 2002년 8월 81만명(5.9퍼센트)보다 크게 늘었다. 시간제 노동자의 대부분(71.4퍼센트)이 여성이다. 여성 노동자 다섯 명당 한 명(21.6퍼센트)이 시간제 노동자다.

시간제 일자리의 열악함은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시간제 노동자 중 상

용직은 10.9퍼센트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고용이 66퍼센트였다. 시간제 노동자의 평균 월임금총액은 75만 9000원으로 정규직 대비 23퍼센트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61.9퍼센트에 그친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며 ‘양질의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2014년에 도입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주 20시간 근무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며 겸직도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홍보했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자들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없었다. 각 기관장이 근무시간을 정해 노동자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오전·오후를 교대하거나 시간제로 전환한 전일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의 공백을 메우도록 했다. 명절상여금을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만 주는 등 차별이 심했다. 겸직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이후 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 절반이 2018년 현재 이·퇴직했을 정도로 이 일자리에 대한 불만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확대하려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충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매우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으려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 임금 삭감·노동조건 후퇴 없이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또한 질 좋은 공공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편,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크게 늘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노동자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시간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등 시간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전일제 노동자들이 육아·간병 등을 위해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보장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육아휴직 급여 수준도 인상해야 한다.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복지 확대를 정부·기업들과 ‘사회적 대화’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일각의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지금 같은 경제 불황기에는 어렵도 없다.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은 노동 계약에 단호하게 맞서면서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할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한다.

박근혜가 못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문재인이 이어받다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세 법률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안전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담겨 있다. 이전에는 기업이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 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세 법은 새 제품의 안정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도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한의 안전성 입증 책임도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검토를 마치면 일단 허용한다. 예컨대 자율(무인)주행차가 도로에 다닐 수 있게 하거

나,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가스탱크와 수소연료 충전소의 안전성 검사도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식이다.

정보통신융합법의 경우 특히 원격의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애플 등 스마트워치 제조사들은 손목시계를 통해 심전도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문제는 이 기술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예컨대 누군가 심장 질환으로 통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시계가 원격으로 연결된 의사에게 기록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자. 만약 시계가 오류로 ‘정상’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권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 등 수많은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원격의료에 반대해 온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이밖에도 원

격의료를 본격 허용하는 추가 조치들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주용 종합선물세트

공공기관들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도 정부 계획에 일부 포함돼 있다. 이는 공적으로 개발된 기술과 정보를 민간 기업에 헐값에 넘겨주는 특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지만, 실제로는 이윤 ‘맞춤형’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환자들의 정보를 취할 수 있다면 그 이익은 개별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돌아갈 것이다. 보험료를 추가로 받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융합촉진법의 경우 정부는 ‘음

식 배달 로봇’, ‘자율주행(무인) 버스 운행’, ‘무인선 운행’, ‘지체차를 탑재한 트럭’ 등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충분한 안전성 확인 없이 상용화할 경우 모두 당장 인명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기업주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정부 자신이 검증도 없이 허용해 놓은 마당에 과실을 찾아내면 책임져야 할 정부(와 담당자)가 문제를 찾으려 하거나 할까.

규제자유특구법에는 앞서 언급한 조치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명시된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조항들이 수십 개 나열돼 있다. 그 밖에도 병원들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정 늘려 주는 의료 영리화 조치, 전력산업의 부분 민영화, 가스·건축·도로·소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 완

화, 국·공유자산의 임대 매각 규제 완화 등 수많은 규제 완화 조치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야말로 기업주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그래서 문재인도 박근혜에 대한 대중의 증오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에는 이 법을 ‘적폐’라고 부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앞서 통과시킨 규제완화 법률 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추가로 밀어붙이겠다고 버리고 있다. 10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이를 재천명했다.

이런 조치들은 세계경제와 한국 경제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경쟁력을 높여 주려는 시도다.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대가로 말이다.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정호중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규직 인력 대폭 충원!

장호중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파업에 나섰다. 13일에도 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민들레 분회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 분회는 지난 달에도 나흘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약속보다 반년이나 늦게 논의에 나서더니 결국 자회사 방안을 내놔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각종 차별도 여전히 남는다.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반대하며 서울대병원 측이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희망고문

병원 측은 민들레분회 소속이 아닌 파견용역직 일부는 '고도의 전문직'이라며 아예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 이들도 병원에 꼭 필요한 일들(전산, 승강기, 임상시험 등)을 하는 노동자들인데 말이다.

병원 측의 이런 태도 때문에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은 취입 이후 시간만 끝나가 빈 강통이 됐다.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년 넘도록 희망 고문만 하다가 결국 노사가 알아서 하라고 내팽개쳐 버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자회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직접고용을 할 때조차 별도 직군을 만들거나, 임금체계를 따로 만들기도 한다. 이튿표만 달라지고 임금 등 노동조건은 그대로 묶어두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박근혜 폐책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서창석이 여전히 병원장으로 앉아 이런 짓을 벌이고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인 의료연대본부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서울대병원 노동자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파업에 나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고군분투 해 온 상황에서 잘 조직돼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게다가 인건비 증가를 막겠다는 병원 측의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통에 내몰아 왔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 온 정규직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더니 오히려 주 52시간 노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버렸고 이조차 누더기로 만들었다.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를 강제하기

는커녕 편법을 합법화한 셈이다. 서울대병원은 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제한하려면 당연히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데 올해 들어 서울대병원이 충원한 인력은 통상근무자 0명, 교대근무자 6명이 전부다. 서울대병원 교대근무자는 2300명이다. 새벽의 피도 안 되는 것이다.

연대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려온 간호사들은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이 상당하다. 야간노동에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주 40시간도 버겁다. 임신과 출산이라도 겹치면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돼 버린다. 간호사들은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에 혈안이 돼 이런 상황

을 방지하는 병원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리 없다. 올해 초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시간 외 노동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지급 명령 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직무급제, 성과급제 추진에 발맞춰 임금체계를 뜯어고쳤다. 이 과정에서 각종 수당을 없앴 것은 물론이고 신규 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각종 휴가도 줄여버렸다. 지난해 서울대병원분회는 파업을 벌여 이 중 일부를 되찾아왔다. 그럼에도 신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지는 못했다.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위

협이 있는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쥐어짜며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 측에 맞서 노동자들이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정당하고 의미가 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에 나서면 병원 측을 압박하는 데도 훨씬 효과적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공공기관은 국가가 운영하므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운다면 모두의 조건을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 충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은 노동자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이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발표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OECD 꼴찌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5퍼센트를 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정부의 종합대책의 주된 내용은 공공의료를 책임질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책임 의료기관에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민간의료기관도 포함된다. 종

합대책은 아예 “의료 공급의 9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도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민간병원도 공공의료를 할 수 있다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했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공병원을 폐원하지는 않지만 확충 의지도 없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병원이 없을 경우 공공병원을 보강하거나 신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확히 몇 곳이 부족한지, 공공병원 몇 곳을 더 설립할지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은 내놓지 않은 것을 봐도 그렇다.

결국 수익성 중심의 기존 의료체계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여느 병원들과 마

찬가지로 수익성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국립대병원의 수익성 위주 경영평가도 교육부만이 아니라 복지부도 공동으로 평가한다는 것 외에 달라지는 점은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종합대책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조정과 지원 수준에 머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스스로 “시도의 조직과 전문성 부족”을 인정하면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모순이다. 지방 정부들은 공공의료를 확대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 결국 지방정부들은 민간의료기관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종합대책은 “ 시도 보건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을 개정해, 전문적인 독립 재단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공공의료를 민간에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일종의 의료 민영화라 볼 수도 있다. 또한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인데도 “민·관 추진단”을 마련해 이행한다는 걸 보면, 공공의료를 민간에 의존하겠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나마 사줄만한 것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세워 국가가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조차도 의사 인력 위주인 데다 규모가 너무 작고, 턱없이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한 대책은 없다.

사실 ‘공공의료 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과 근본에서 모순된다. 규제프리존법 통과, 의료기기 규제완화, 원격진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종합대책에 “지역공동체 기반 지속적,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가 있지만 이는 민간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과 부딪힌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가 대개 그렇듯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도 기존 의료자원을 건드리지 않고 돈 드는 일은 철저히 배제하다보니 알맹이가 없다.

김재현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뜻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비난, 이에 대한 노동조합들의 반발은 그런 갈등의 단면을 보여 준다.

이것은 단지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와 노골적인 우선화가 근본적인 쟁점이다. 민주노총 정책대의 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결정이 불발된 것도 바로 이에 대한 적잖은 조합원들의 불만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 첫 1년을 관망하던 노동자들은 불만이 증대하면서 일부가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특히 올해 여름 이후에는 항의 수준을 넘어 파업도 하기 시작했다. 정책대의원대회 이후에는 불만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친기업 본색을 노골화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매몰차게 외면해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기로 정부와 여야 정당이 합의한 것이 대표 사례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대한 정부·여당과 중도진보 언론들의 압박이 민주노총 내 경사노위 참여파에게 힘을 실어 줄 법도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오히려 경사노위 참여를 지지하는 인사들조차 “이러면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하다”고 할 정도다. 심지어 한국노총조차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름만 바꿔 계속되는 규제완화, 노동개악

문재인 정부 우선회의 배경에는 경제 위기 심화가 놓여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빠졌다. 투자가 급감하고 고용 사정도 악화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는 논리로 친기업 정책을 노골화하고 나섰다.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10월 24일 발표)에서 정부는 기업들에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문재인 정부 용어로는 “규제 혁신”)는 두루 알다시피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조건은 물론이고 서민층 일반의 삶을 악화시킨다.

가령 정부는 “연구가 부족해도” 기술 혁신성이 높으면 신의기술로 인정하고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명분으로 한 이런 규제 완화는 노동자와 서민층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올해 6월 30일 8만 명이 모인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민주노총 집행부는 투쟁을 확대해야 했다

또 다른 예로,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디지털 특고” 양산과 연결된다.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용자들이 고용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을 정조준해 공격하고 있다. 임금 억제와 장시간 노동은 착취율을 높여 자본가들이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격차 해소 방안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임금 스펙트럼 가운데 중간 어디쯤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광주형 일자리처럼 “임금” 세팅을 갈게 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대표적인 임금 공격 사례다. 기존 임금의 절반을 주고 소형차 생산장장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산별 표준임금률을 정하는 것은 노동운동 상층에서도 유력한 연대임금 방안으로 제안돼 왔다. 이 점에서 급속 사용자들이 고용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을 정조준해 공격하고 있다. 임금 억제와 장시간 노동은 착취율을 높여 자본가들이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대표적인 임금 공격 사례다. 기존 임금의 절반을 주고 소형차 생산장장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가



문재인은 친기업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다. 산업법위 확대로 이미 한 차례 쫓겨나온 개악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는 차등 적용 개악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명세 업종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처럼 저임금 개선이 가장 필요한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은 노동시간 공격인 동시에 임금 공격의 사례다. 정부와 여야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사용자가 원할 때 동자 임금 삭감 정책일 뿐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에 다른 노동자들보다 높으므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최근 교육청들이 거의 삭감 수준으로 정해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2.6퍼센트)을 근거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그 이상 올려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 최저임금을 연거푸 개악하려는 것도

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는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지난 7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건 말짱 도루묵이라는 뜻이다. 게다가 수당마저 못 받게 된다.

수리 노동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이렇게 우려했다. “성수기 전체인 5개월간 주 60~70시간 일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 노동강도로 산재 위험에 놓인다. 그나마 손에 쥐었던 시간의 수당도 빼앗아 가려 한다.”

이것은 일거리가 늘어다 사용자들이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에 의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모순된다. 또, 정부는 탄력근로제를 “사회적 대화”로 추진하자더니 이마저도 내뱉겨 버렸다.

노동자대회 이후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공격을 저지하려면 단호하게 싸워야 하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럴 잠재력은 있다.

노동자들은 2008년 촛불의 경우와 달리 2016년 박근혜 퇴진 투쟁의 주요 참가자들이었기 때문에 사기가 괜찮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투쟁에 나섰다. 그런 투쟁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한계를 드러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 일부도 투쟁 대열에 합류해 왔다.

노동자들이 크고 작은 투쟁에 나섰다. 분산돼 싸워 투쟁이 보편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주로 노동운동의 상층 지도자들 다수가 문재인 정부와 맞서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가령 올해 상반기에 8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6월 30일) 이후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투쟁을 확대하자는 커녕 청와대 면담을 추진하면서 대결보다는 대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노동자대회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됐던 안 된다. 지금은 상반기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쌓여 있고 확대 잠재력도 더 크다. 단지 비정규직뿐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공

약 파기와 임금 삭감과 유연 근무 같은 공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잘 조직된 대규모 노조들도 투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노조들은 몸집이 커 움직이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움직이면 정부를 압박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그러려면 “상대적으로 나은 조건의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한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거짓말들을 잘 반박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의 목적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 안팎의 친정부 온건파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변화될 뿐이라고 여전히 압박하고 있을 것이다. “교섭장 바깥을 기웃거리다가는 얻는 게 없을 것”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들이 양보할 기미도 없는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화에 미련을 두고 투쟁을 협소한 개별 부문들에 가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장력을 잃고 주변화되는 길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단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이 걸린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탄과 탄력

근로제 개악 등에 맞서 잠재된 힘을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각계의 친문적 인사들이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임금 억제 등 중간 삭감 양보를 얻어 내는 것이다. 둘째, 노사갈등을 줄이고 ‘산업평화’를 이루는 것이다.(도대체 누구의 평화이고,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이해한 민주당 대표는 이런 목적을 감추지 않는다. 그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비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수준이 오르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할 국면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하의 사회적 대화는 전과 달리 경제 위기 시 양보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사회 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순진하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끼워별 부문들에 가둔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위”라고도 한다. 하지만 한국 자본주의를 위기에서 구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이 걸린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탄과 탄력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작 ‘단체’ 결성만 인정하겠다 한다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박설

문재인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이행, 노조할 권리 보장을 약속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위한 그 어떤 조치를 추진하지도, 의지를 내비치지도 않고 있다. 문재인이 11월 국회를 앞두고 한 국회 시정연설, 여야 정 협의회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27년째다. 그동안 ILO는 한국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노동 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직접고용 촉진 등을 수 차례 권고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은 노동운동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주요 참가자여서 노동계에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ILO 기본협약 비준·이행을 약속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로 끌고 간 것은 불순한 목적이 있다. 노동기본권을 노사정 협상의 거래 대상으로 삼아 노동자들에게 후퇴를 강요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논의는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최근 정부는 빈껍데기뿐인 공익위원 안을 적극 지지하며 노사정 합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은 공익위원안에 동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합의라도 있어야 법 개정과 투쟁의 발판을 놓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김명환 집행부는 “단계적 추가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논의에 직접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김명환 집행부에 반발하며 항의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 소속 대표자들은 대체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논의와 선을 긋고, 독자적인 투쟁과 요구를 해 나가자’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공익 안은 대리운전·화물·건설 기계 등 복수의 사용자를 둔 특수고용 노동자 단결권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게 없다. 지난해 대리운전노조 설립신고 반려에서 보듯, 이 문제가 단결권을 가로막는 핵심인데 말이다.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도 형식적인 노조 인정(단결권) 문제에만 국한했는데, 그조차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돼 온 핵심 쟁점, 즉 공무원노조·전교조·기간제교사노조의 단

현 상황의 잠재력과 투사들의 과제

노동조합 투사들은 현 상황의 잠재력을 알아야 한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사노위 참가 뜻을 거듭 밝혀 왔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의 노동자 공격이 점점 노골적이 돼서, 기존 노동자들의 불만이 증조하고 있어서다.

노동자들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취한 후퇴에도 불만이 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제 합의, 민주노총 지도부가 경사노위 노사관계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은 것 등이 그

런 사례다.

위아래 모두로부터의 이런 압력 때문에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경사노위 문제에서 합심하고 있지 못하다.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사회적 대화보다 투쟁에 힘을 실으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좀 더 받고 있다.

투사들은 이런 분위기가 투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계급을 더욱 분열시키는 갖가지 주장들을 못 들은 척하지 말고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투쟁과 연대투쟁을 촉구해야 한다.

연재 기사 - 웹사이트를 확인하세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의 성격이 크게 변할 거라고 걱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신화를 이용해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플랫폼 특고, 일터 혁신, 제조업 육성, 서비스 발전, 교육 등 4차 산업혁명과 관계없는 쟁점이 없을 정도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왜 그토록 4차 산업혁명 법석을 떠는 것이며, 그것은 노동의 미래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본지는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에 관해 다음 순서로 연재 중이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①에서 ⑤까지 읽을 수 있고, 다음 주부터 연재가 재개된다.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 ②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허풍
- ③ 분권화된 네트워크형 새로운 자본주의?
- ④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성격 변화?
- 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까?
- ⑥ 기술 혁신과 노동자들의 처지
- ⑦ 노동조합 투사들은 기술 혁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브라질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노동자 운동은 보우소나루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극우파 대통령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은 한국의 진보·좌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극우 당선 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을 브라질 사회주의자 **산드라 시우바**가 전한다.

브라질의 평범한 사람들이 극우의 부상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산드라 시우바는 상파울루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다.

시우바는 급진좌파 정당인 사회주의와자유당(PSoL)의 국회의원 후보 에리카 마룬지뉴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약 한 달 전 상파울루에서 출마한 마룬지뉴는 브라질 최초의 트랜스여성 국회의원이었다.

시우바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이번주에 열린 보우소나루 규탄 문화제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선주민들의 집을 대상으로 한 방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정치적 결정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우바는 이렇게 덧붙였다. “보우소나루는 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보우소나루는 부패 전과범들에게 직책을 쥐 자기 주변에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우소나루의 당선 소식에 슬퍼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제는 뛰쳐나와 저항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우



“그[보우소나루]는 안 돼!” 극우파 당선 직후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리는 앞으로 할 일을 예행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시우바는 보우소나루 선거 승리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온 과정을 묘사했다.

항의 운동은 보우소나루에 대한 압박을 키울 수 있다. 보우소나루의 의회 내 입지는 불안정하다.

항의 운동이 강력한 브라질 노동계급에게로까지 번지면 보우소나루가 버틸 수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시우바는 이렇게 지적했다. “보우소나루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보우소나루의 경쟁 후보(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당(PT))의 후보

페르난두 아다지)를 지지하지 않았습

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보우소나루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적잖은 사람들이 생애 최초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러 거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대중적 교육을 받기 시작해, 보우소나루에 투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토론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우소나루 지지가 급등한 것은 대체로 뜻밖으로 여겨졌지만, 예측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보우소나루가 선거운동 기간에 칼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진 후, 보우소나루는 순교자인 척할 수 있었고 지지율

이 급등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허를 찔렸다.

오판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한 친기업 정당들과 노동자당은 모두 보우소나루에 추월당했다.

시우바는 이렇게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당은 노동자들과 연계가 깊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당은 집권 후 모든 역할을 제도권 정치에 집중했고, 노동자당은 기층과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시우바는 이렇게 주장했다. “노동자

당 집권기에 운동이 의회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패착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보우소나루에 맞선 대중적 정치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운동은 제도권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시우바에 따르면, 보우소나루에 투표한 사람들 일부가 보우소나루 당선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보우소나루의 주장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보우소나루가 선거운동 기간에 그 저 허풍을 떨었던 것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보우소나루는 하겠다고 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뉴스, 특히 채팅 SNS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시우바는 노동자당의 선거 패배는 당 지도부가 대중과 자신들 사이의 연계를 끊어 버린 것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시우바는 지금 브라질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시우바는 브라질인들이 보우소나루 정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우소나루 정권에 대한 특효약은 대중적 저항입니다.

“조만간 국제 공동 행동을 벌이자는 계획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9호 / 번역 김준호

도널드 트럼프, 이주민 행렬에 발포 지시하다

인종차별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남쪽 국경으로 군대를 보냈다. 그러면서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다.

멕시코를 가로질러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 행렬(일명 카라반)은 약 1만 20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주민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려는 단체 네 곳이 만나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그 이주민들은 미국 제국주의의 범죄적 행위로 파탄 난 나라들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로부터 탈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 범죄자들”이라는 모욕만 받고 있다.

그 이주민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라도 얻으려고 모든 것을 걸고 있는데 말이다.

멕시코 국경 지대의 마을 테노시케에서 이주민 보호소를 운영하는 토마스 곤살레스 카스티요는 이주민 행렬이 지나는 길 일부는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위험 지역”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는 미군 1만 5000명을 국경으로 보내라고 명령했고, 그 부대들은

속속 국경 지대에 모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주민이 돌을 던지면 “총을 쏜 것으로 간주”하라고 군인들에게 말했다.

텍사스주 시민단체 ‘강제 수용 이주민들을 위한 연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앨런 디커는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는 이주민들을 살육해도 될 정도로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만들려 애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경수비대는 돌을 던지는 어린 아이들을 살해해 왔습니다. 그 돌이 치명적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전쟁터

디커는 이렇게 덧붙였다. “트럼프는 미국 남부가 전쟁터라는 거짓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군대가 맞서 싸울 적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시위 진압복을 입고 다리에 모여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어처구니없는 광경이죠.”

트럼프는 이주민 행렬을 공격하는 한편으로, 미국 국내에서도 진정한 이주민 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10월 30일 트럼프는 [미국 내] 이주민들과

난민 신청자들을 “체포할 것이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어느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곳곳에 텐트를 쳐 놓을 테니 그들[이주민·난민신청자들]은 거기서 기다려라.”

이주민 수용 캠프[난민촌] 10곳이 마련됐는데, 그곳에는 보호자 없는 아이들이 혼다.

디커는 “텍사스주 엘파소 외곽의 토르네오캠프에서 수용 아동이 하루 아침에 800명에서 3500명으로 늘어난” 과정을 설명했다.

디커는 트럼프가 언급한 이주민 수용 캠프는 군부대 안에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아동들이 여전히 강제 수용돼 있다.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말하면, 부모들도 체포돼 갇히게 된다.

현행법 하에서 이민 심사 면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풀려나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이주민 행렬 쉼터

투쟁이 대안이다

인종차별은 미국 공화당의 주요 전략이다. 중앙 정치와 지역 정치 모두에서 그렇다. 11월 4일 조지아주에서 트럼프는 연설을 하며 이주민을 “외부인 범죄자들”이고 “악탈자들”이라고 공격했다. 지역 정치 영역에서도 공화당 정치인들은 정적들을 대상으로 온갖 인종차별적 공격을 이용한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아닌 대안임을 자처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뭔가를 약

속하지 않으려 주의 깊게 애쓴다. 민주당은 트럼프와 러시아의 내통 혐의를 공격하는 데에 힘을 기울여 왔다.

트럼프에 맞서는, 상위 1퍼센트가 나머지 99퍼센트보다 25배를 버는 사회에 맞서는,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9호 / 번역 김준호

브라질이 파시즘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일까?

알리스터 패로우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은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보우소나루에 맞선 투쟁에 나설 잠재적 힘이 있다는 것은 보우소나루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고 **알리스터 패로우**는 주장한다.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대통령 당선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인구가 2억 1000만 명이고 경제 규모가 세계 8위인 국가의 운전대를 극우파 인사가 잡은 것이다. 보우소나루는 여성, 성소수자, 흑인 등 모든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다. 보우소나루는 저지되어야 한다. 평론가들은 이 선거 결과를 보며 보우소나루와 그의 정치를 뭐라 규정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르헨티나 역사학자 페데리코 핀첼스타인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이렇게 썼다. “보우소나루의 포퓰리즘은 히틀러 시대를 연상시킨다.”

핀첼스타인이 쓴 글의 제목은 이렇다.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물모텔은 [이탈리아의 부패한 우익 정치인이자 전(前) 총리] 베를루스코니가 아니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괴벨스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자당(PT)은 보우소나루를 히틀러와 나치당에 빗대는 홍보 영상을 내보냈다.

혁명적 좌파 일부도 보우소나루를 파시스트나 유사 파시스트로 봤다. 보우소나루가 파시스트이나 아니냐 하는 논쟁은 중요하다. 좌파가 보우소나루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논쟁은 브라질의 계급 세력 균형이 어떤지, 보우소나루 당선의 국제적 의미는 무엇인지, 저항의 가능성은 어떤지 등과도 관계 있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파시즘을 프티부르주아의 대중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프티부르주아는 농민, 상점주, 소자본가 등 중간계급을 일컫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파시즘은 농민에게서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에게서는 소수의 지지를 받았다.

파시즘의 특징

파시즘의 목표는 노동계급의 힘과 조직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파시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독특한 위협이고, 따라서 분쇄할 필요가 있다.

파시즘은 사회적 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권력을 잡는다.

자본가 계급은 보통의 의회민주주의로는 더는 사회를 통치할 수 없게 될 때 파시즘의 지배라는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

파시스트들은 권력을 잡은 후에는 [자신을 권좌에 올린] 옛 지배계급과 반목하는 경우가 흔하다.

[1920~1930년대에]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파시즘이 부상했던 주된 맥락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다.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11월 1일 보우소나루 당선 후 저항 운동 건설을 논의하는 상파울루의 대학생들

당시 전 세계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의 반란 정신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파시즘은 그 정신을 꺾을 극약 처방이었다.

컬럼비아대 교수 로버트 팩스턴은 《파시즘 —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교양인, 2005)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날] 불세비키 혁명은 위협 속에 끼지도 못한다.” 이어서 팩스턴은 오늘날에는 “고전적 파시즘”과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파시즘의 구체적 형태는 나라마다 다르다.

1920~1930년대의 이탈리아 파시즘은 독일 나치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파시즘은 과거의 파시즘과 차이가 있다.

위험한 적

물론 보우소나루를 파시스트로 규정하든 아니든 그가 위험한 적이며 반드시 저항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보우소나루를 파시스트로 보는지도 쉽게 알 수 있다.

보우소나루 진영의 몇몇 인사들은 정말로 파시스트라고 할 만하다. 보우소나루는 증오를 부추기고 좌파를 공격할 목적으로 대중 시위를 조직한다.

대선 전에 열린 집회에서 보우소나루는 브라질에서 “좌파 범죄자들”을 일소하겠다고 공언했다.

보우소나루의 극도로 인종차별적인 연설 때문에 파시스트의 기세가 오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보우소나루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독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보우소나루는 1964~1985년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데,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보우소나루는 “군부 정권이 못한 일, 즉 3만 명 숙청의 과업”을 하겠다고 말한다.

보우소나루는 중간계급 사람들에게 구애한다. 노동자당 소속의 전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에게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그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브라질에서 파시스트가 권력을 장악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은 브라질 자본주의는 파시즘의 힘에 기대야 할 만큼 위기가 심각한 것도 아니다.

보우소나루 지지 거리 운동은 지금까지는 보우소나루의 선거 전략에서 보조적인 것이었다.

이제 보우소나루는 국가의 힘에 기댈 수 있다.

보우소나루는 자기 권력의 기반을 대중 운동이 아니라 이 기성의 억압 기구에서 찾는다.

보우소나루의 대선 공약 하나는 경찰을 해방시켜서 자신이 반대파로 지목한 사람들을 탄압할 사실상 무제한의 힘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보우소나루는 육군 대위 출신의 직업 정치인이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즘 운동으로 아래로부터 부상한 것과는 달리, 보우소나루는 [대중] 운동을 정치적 야망을 실현할 보조적 도구로 본다.

이것은 파시스트들의 전통적 권력 장악 방식과 다르다.

트로츠키는 파시즘이 “프티부르주아지와 탈계급화되고 사기가 떨어진 룬펜프롤레타리아 무리”의 대중 운동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다고 묘사했다.

보우소나루와 그 지지자들이 트로츠키의 설명에 들어맞지 않으니 그들의 위험성을 가늠이 여기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치적 궤적이다.

보우소나루 정부 하에서 진정한 파시즘 운동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도 많다. 예컨대 군부 독재가 다시 들어설 수도 있다.

위선적이게도 보우소나루는 노동자당의 부패에 맞선 중간계급 주도 운동의 지도자를 자처했다.

브라질연방대학의 연구원 사브리나 페르난데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브라질 극우파 운동은 무엇보다 중간계급

을 동원했다. 지우마 호세프 탄핵에 즈음해서 벌어진 운동은 특히 그랬다.”

보우소나루는 세르지우 모루 판사를 법무장관에 지명했다. 모루는 [노동자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 수사 당시] 노동자당 전(前) 대통령 물라를 수감한 인물이다.

모루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보우소나루 지지층에 주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보우소나루는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이며, 지지자들은 계속 운동을 벌이라는 것이다.

운동 건설

보우소나루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점차 파시즘적인 방식으로 조직해야 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우소나루가 경제 보좌진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영기업 147곳을 민영화한다면 노동자들은 저항할 것이다. 노동자 투쟁이 벌어진다면, 보우소나루는 군대를 동원해 파업을 분쇄하고 거리 시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보우소나루가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파울로 구에메스는 보우소나루 정부가 피노체트 독재 정권의 경제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피노체트는 1973년에 잔혹한 군사 쿠데타로 집권했다.

그런 정책을 밀어붙이면 격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격돌에서 보우소나루는 패배할 수도, 국가 폭력을 부추길 수도, 파시즘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보우소나루는 대선에서는 압승했지만, 의회에서는 고립돼 있다.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총선에서] 보우소나루의 정당인 사회자유당(PSL)은 하원 의석을 기존의 1석에서 52석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56석을 차지한 노동자당이 여전히 제1당이다.

이번 브라질 의회에는 역대 최다인 30개 정당이 저마다의 의제를 관철하려 쟁투를 벌일 것이다. 이 때문에, 보우소나루가 어느 정당과 연합을 맺든 그 연합은 매우 취약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우소나루는 프티

부르주아의 대중적 파시즘 운동이 아니라 군부를 동원해 자기 의제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우소나루는 군 장성들로 주변을 채우고 있다. 국방장관 지명자 아우구스토 헬레노는 군부 독재 종식 이후 최초의 군 출신 국방장관 지명자다.

부통령 당선인 해밀튼 모라우 역시 군 장성 출신이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자유당 국회의원 당선자 다수가 군 관련 이력이 있는 인사들이다.

보우소나루가 강세인 상파울루에서 사회자유당 후보 15명이 국회의원에 당선했는데, 그중 9명이 군 장교 출신이다.

대선 투표 전날 군대가 대학들을 침탈해 사람들을 체포하고 반파시즘 모임들을 해산시켰다. 군부는 [보우소나루 당선] 이전에도 브라질 사회에서 매우 강대한 기구였다.

노동자당 집권기에 군부의 힘은 더 강화됐다. 노동자당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했다.

노동자당 정부는 브라질 군대를 아이티에 파병하기도 했다. 2004년 아이티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를 미국 특수부대가 납치해 추방한 후, 사후 뒤처리를 담당한 유엔군을 돕기 위해서였다.

[당시] 브라질 군대는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빈민가를 습격해 수십 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다. 이런 자들이 현 보우소나루 정권의 핵심부에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파시스트 국가가 아니지만, 보우소나루 정부는 브라질과 전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다.

보우소나루가 기어이 군부 독재로 회귀하더라도, 지난번 군부 독재가 대중 파업으로 무너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조합은 여전히 강력하고 보우소나루와 우파에 타격을 가할 잠재력이 여전히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29호 / 번역 김준호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반(反)트럼프 정서와 함께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김준효

이 글은 11월 7일에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11월 6일 미국 하원의원 전체(435명), 상원 약 3분의 1(35명), 주지사 39명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정부 심판 성격 때문에 크게 주목받았다. 투표율이 중간선거 사상 최고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중간선거로는 최초로 1억 명이상이 투표했다.(사전 투표에만 약 4000만 명이 참가) 특히 청년과 여성의 투표 참가가 두드러졌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수성했으나 “대단히 성공적”인 선거였다고 자축했다. 특히 격전지였던 플로리다주 등 4개 주에서 현직 민주당 의원을 꺾고 자파 후보가 당선했으며, 당내 강경 우파 ‘티파티’의 핵심 인사 테드 크루즈도(민주당과 표차가 크게 줄었지만) 재선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가 지원 유세한 의원은 모두 승리하는 ‘트럼프 파워’” 운운하기도 했다.(실제로는 3명은 낙선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득표율(55퍼센트)이 공화당 득표율(43퍼센트)보다 컸다. 그럼에도 미국의 비민주적 선거제도(인구 비례와 상관 없이 모든 주에 2석씩 배정) 덕분에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 상원은 대법관 등 핵심 관료 임명에 대한 동의권, 하원의 입법안을 반려할 권한 등이 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강경 우파 인사를 요직에 임명하고, 성에 차지 않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트럼프 심판 표심 덕에 8년 만에 다수당이 됐다. 사상 최초의 무슬림 여성 의원과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의원을 배출했다.(이번 선거는 여성 하원의원이 사상 최다로 당선한 선거이기도 하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일리노이주·미시건주 등 7개 주에서 현직 공화당 주지사들이 재선에 실패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 실질 임금을 삭감하고 단체 행동권을 제약해 저항에 부딪혔던 위스콘신주의 스콧 워커가 낙선했다. 이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식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대중의 반(反)트럼프 정서가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러나 대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은 그간 이민·복지·차별·전쟁 문제 등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대중의 바람을 대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트럼프를 상대로 크고 작은 쟁투를 벌이기는 했지만, 감세·이민 등 중요 쟁점에서는 트럼프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최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다가오는 이주민 행렬의 곤경을 못 본 체해 빈축을 샀다.

심지어 이번 선거로 하원 의장이 된 민주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는 “분열을 종식시키겠다”면서 트럼프 탄핵안을(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발의하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러시아 스캔들’을 정쟁의 무기 삼아 트럼프를 공격하겠지만,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이며 반(反)노동자적인 정부를(실현 가능성은 별개로) 중도 사퇴시키려 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대안

주목할 만한 일은 미국민주사회주의당(DSA) 활동가들을 비롯한 민주사회주의당 후보들의 선전이다(대체로 민주당 후보로 출마). 이들은 뉴욕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뿐 아니라, 디트로이트처럼 한때는 민주당 텃밭이었으나 오바마 정부에 대한 실망 때문에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표가 많았던 지역에서도 출마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비협조에도, 몇몇은 70퍼센트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하원의원에 당선했다. 그중 뉴욕시 내 서민 지구에서 당선한 DSA 당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29세의 푸에르토리코계 여성이다. 그는 2016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측 선거 조직자로 활동했었다.

이들의 선전은 미국에서 **사회주의적 대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런 정서가 ‘가파르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미국 공식 정치에 ‘사회주의 국회의원’이 진출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다.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반대 정서를 읽을 수 있었음에도, 트럼프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주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친기업적·친제국주의적이기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의존해서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의미 있는 성적을 거뒀다 해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DSA가 미국 지배계급 정당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대중 투쟁이 더 커져야 한다. 그런 투쟁은 의회 내 책략이 아니라 교사 파업 등 노동자 투쟁에서, 무슬림 입국 금지 등 인종차별에 맞선 운동에서, 성차별에 반대하는 대중 행동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투쟁 속에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당에 표를 던지고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과 진정한 반자본주의적인 대안을 건설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로 트럼프에 맞서 싸우자” 여성들의 트럼프 취임 향의 시위에 연대를 표하는 미국민주사회주의당 당원들

미국에 부는 민주사회주의 바람

지난 몇 해 사이 ‘민주사회주의’가 미국 정치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2015년 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입후보하면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것이 본격 시작이었다.

샌더스는 2010년 부자 감세 법안 시행 2년 연장에 항의해 8시간 37분 동안 필리버스터(고의로 길게 연설하는 등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의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그 인기의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수준이 공격받고 불평등이 증대해 온 것이 있다. 특히,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았던 버락 오바마가 대중의 변화 염원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샌더스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그 왼쪽 대안으로 관심을 끌었다.

2010년대에 부상한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 여성·성소수자 차별에 항의하는 운동, 강경 우파 ‘티파티’에 맞선 운동 등 중요한 대중 행동들도 급진적 대안을 염원하는 정서가 자라나는 비료가 됐다. 노동자들도 오랜만에 투쟁에 나섰다.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패스트푸드·윌마트 노동자들 등이 파업을 벌였다. 교사들은 몇몇 주와 대도시

에서 여러 차례 파업했다.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혁명적 정치는 아니다. 국가를 이용해 친서민 개혁을 제공하려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샌더스와 지지자들의 주요 요구는 이렇다: 부자 증세, 금융투기 규제, 최저임금 인상, 인종·성별에 따른 임금·노동조건 차별 철폐, 단일 의료보험 제정, 노년층·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초·중등 무상 교육, 대학 공공성 강화 등.

샌더스의 “정치 혁명”(샌더스가 자신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도전을 일컫는 말)은 대중의 변화 염원을 고무했다. 비록 샌더스 자신은 경선에서 패한 후 뺏속까지 기업인 편인 힐러리 클린턴을 대선 후보로 지지했지만, 대선 후 지금까지도 샌더스는 개혁 염원을 대변하는 미국 최고 인기 정치인이다. 파업 집회에 참가해 지지 연설을 하는 등 샌더스의 친노동자 친서민 정치는 수많은 지지자(특히 청년)들을 운동으로 이끌었다.

주로 청년층인 샌더스 지지자들은 대선 후 ‘아우어 레볼루션’(우리의 혁명이라는 뜻으로, 버니 샌더스가 대선 직후 출판한 책 제목에서 이름을 따왔다)이라는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트럼

프의 인종차별·이주민 차별·성차별에 항의하는 운동에 참가했다. 지역 노동자 파업 지지 현장에도 ‘샌더스 키드’들이 있었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 온 미국 좌파의 일부인 DSA는 이런 흐름과 관계 맺고자 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의 사례에서 보듯,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미국국제사회주의조직(ISO)이 선거 전에 민주사회주의당 지지 투표 호소하기를 사실상 거부한 것은 종파적 태도다.)

물론 샌더스의 ‘민주사회주의’는 약점도 있다. 특히 미국의 대외 정책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을 지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을 동시에 인정하는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기, 대북 제재 강화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하기, 미국 제국주의에 반대했던 베네수엘라의 고(故) 우고 차베스를 “죽은 독재자”라고 비난하기 등.

그럼에도 미국 공식 정치에서 사회주의가 정치 의제로 부활한 것은, 트럼프에 맞선 반자본주의적 대안이 미국에서 구축될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 주고 있다. 지금 민주사회주의로 표현되는 대중의 변화 염원이 더 왼쪽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사상 최초로 무슬림 여성과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 의원이 탄생했다. 이번 선거는 여성 하원의원이 사상 최다로 당선한 선거이기도 하다.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오늘(9일) 새벽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소방 당국은 입주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깊이 잠들어 신고가 늦었던 게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비상벨과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출입구가 화재 때문에 막힌 상태였다.

고시원은 42평 한 층에 2평 남짓한 방 20여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1평짜리도 있었다. 복도 폭은 1미터 남짓이라 2명은 못 지나갈 만큼 좁았다.

창문으로 탈출한 사람들만 겨우 생존했다. 창문 없는 방은 뛰어내릴 수조차 없었다. 그 방은 고작 몇만 원 저렴했을 것이다.

고시원이 있던 건물은 1983년에 만들어져 심각하게 노후한 상태였다. 그런데 되려 오래된 건물인 ‘덕분에’ 안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은 2009년부터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고시원은 2009년 전에 만들어져서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제천 스포츠센



자본주의에서 안전은 무엇보다도 계급 문제다 겹겹 타 버린 화재 현장

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연이은 참사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 실시된 ‘대진단’에서 해당 고시원은 제외됐다. 고시원이 아닌 기타사무소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이 말한 ‘국가 안전 대진단’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2015년부터 실시했지만 별 실효성이 없었다. 근본적 대책(안전 규제 강화, 구조 인력·훈련 예산 대폭 증액 등) 없이 박근혜의 보여 주기 식 대책을 반복한 것이다.

쪽방촌이 된 고시원

오늘날 고시원은 더는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다. 갈 곳 없는 청년들과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들, 노인들,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쪽방촌이 됐다. 도시에서 보증금이 없는 월세 25만~30만 원 짜리 집은 고시원뿐이기 때문이다.

올해 다중이용업소 화재 10건 중 1건이 고시원 화재였다. 고시원은 화재와 보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살, 방화, 흥기 난동 사건도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주류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에 반짝 관심을 보일 뿐 진정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권력자들이 걱정 없이 투자하고 배 불릴 수 있는 사회다.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사에서 매년 밀려난다.

카를 마르크스는 170여 년 전 《1844년 경제학-철학 수고》에서 이렇게 썼다. “가난한 사람의 지하 주거는 적대적이고 낮은 힘을 가진 주거, 그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살점을 줄 때만 얻을 수 있는 주거이며, 그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날 언제든지 그를 내쫓고야 마는 타인의 집에 있을 뿐이다.”

이번 사고의 희생자들은 고된 일용직 노동을 하고 돌아와 자다가 참변을 당했다.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들은 자본주의를 갈수록 ‘빠까뻘썩’하게 만들지만, 아무리 절실하게 집이 필요한 건설 노동자라 해도 그가 지은 건물에 손댈 자격이 없다.

이번 참사는 비정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해야 함을 비극적으로 보여 준다.

김승주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김문성

주요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흠집내고 위협할 인물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갈수록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듯하다.

그동안 이재명 흠집 내기에 앞장서 온 것은 친문 실세 정치인들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의 선제공격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수사를 공개 비난한 것에는 문재인을 향한 불만이 담겨 있다.

경찰이 정권 핵심부의 의증을 거슬러 여당 소속 경기지사(한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로 그 위상이 막강하다)를 이토록 망신 주는 수사를 할 리가 없다. 이 지사의 말처럼, 박근혜 정부의 경찰·검찰도 하지 않았던 들쭉시거다. 게다가 이 지사의 혐의들이라는 게 대부분 개인 사생활과 관련돼 있다.

현재 경찰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검찰로 넘겼다. 그중 일부는 기소 의견을 달았다. 여배우 스캔들 등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지만, 무혐의라는 뜻은 아니라고 굳이 밝혔다.

게다가 이재명 지사 측이 바른미래당 김영환과 여배우 등에게 낸 명예훼손 고발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한국에서는 사실을 말해도, 또 카톡으로 개



민주당 내 진보파라는 게 박해의 요인이다

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의 “불륜”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지지 못한 경찰이 불륜 의혹을 공개 제기한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석연치 않다.

처음부터 이재명 지사를 망신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간 이상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인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검찰도 정권 핵심부의 의증과 다르게 나갈 동기가 별로 없다. 검찰 수사는 곧바로 재판으로 이

어지므로 자칫하면 지사 직을 빼앗기거나 집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가 공개적으로 수사 경찰들을 고발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그러나 이를 뒤 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의 만류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당 수뇌부의 화전양면 작전일 수도 있고, 이해찬의 무책임한 약속에 속은(또는 속아 준) 것일 수도 있다.

반사 이익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우선화를 하며 진보 염원을 배신하는 국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한 데에는 실질적 개혁 정책들을 정말로 집행해 지지를 모은 덕이 컸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 당선 후에도 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공공분야 건설원가 공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올해 당선한 단체장 중 이 지사처럼 드러나게 개혁 추진을 공표한 인사들은 없다. 친문 세력도 진보적이지 않다. 노무현 시절부터 이해찬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했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검증된 게 없다. 신주류라는 이낙연, 임종석 등도 진정한 개혁에

앞장섰던 적이 없다.

무엇보다 문재인 자신의 개혁 후퇴와 배신이 두드러진다. 남북 화해 말고는 별다른 개혁 실천이 없다. 적폐 청산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최근 위안부 문제에서 뒤통수를 치려 한 일이 발각됐다. 기무사와 법원 개혁은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도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노동계급의 조건을 악화시킬 개혁들을 착착 추진하고 있다. 경제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주들을 달래려면 노동개혁이 선결 과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직 노동자 운동의 좌파를 선두로 문재인에 대한 이반과 반대, 저항이 자라고 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대표에다 중도진보계 언론까지 가세해 민주노총의 양보를 압박한다.

정권 실세들이 나서 민주노총 좌파 탓을 하고 여권 내 실세 개혁파인 이재명 지사를 흔드는 건 경제 위기 국면에서 노동운동의 저항과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탄력근무 확대 같은 노동계급에 명백히 해로운 개혁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노총 내 경사노위 참여파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

의 투지와 사기가 낮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인의 우선화와 이에 따른 진보 염원 대중의 이반은 우파가 사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 봄에만 해도 자유한국당은 친노 출신 김병준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 ‘보수 대혁신’ 제스처를 취해야 했는데, 지금은 반대 기류가 역력하다.

박근혜 국회 탄핵에 동참했던 나경원은 이제 뻔뻔하게 이렇게 말한다. “[박근혜가] 한평생을 감옥에 가실 정도의 잘못을 하셨느냐.” 개신교 우익과 태극기 측은 합동으로 11월 17일 정권 퇴진 총궐기를 예고했다.

따라서 친문의 의도대로 이재명 지사 제거에 성공하더라도 여권이 안정적인 친문 체제를 구축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보다 양극화 추세 속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과거 민주당 정부를 반복할 공산이 크다. 어정쩡한 중도파들이 양극화에 의해 압박되는 세계적 추세가 한국에서도 그다지 오래지 않아 나타날 수 있다.

문재인과의 거대한 협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 정부들로부터 충분히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해서 노동운동이 겪었던 시기 저하와 방향감각 상실을 반복하면 안 된다.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정선영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위기 등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 경제도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10월 한 달간 한국 증시는 폭락했는데, 그 하락 폭은 주요 국가 중 최대였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터키 등지에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진행될 때 한국은 예외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금융 시장뿐 아니라 실물 경제도 침체하는 경향이 분명해지고 있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개선 추세”라고 하더니 말을 바꿔 침체로 접어들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올 들어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3분기 설비 투자는 지난해보다 7.7퍼센트 줄었다. 건설 투자도 8.6퍼센트가 줄었다.

물론 올해 투자 감소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급증한 반도체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투자가 60퍼센트 이상 늘면서 전체 설비투자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반도체 말고는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외국계 기업 10곳 중 4곳이 내년 한국 투자를 줄이겠다고 해, 내년 투자 전망은 더 어두운 상황이다.

실업률도 증가했고, 고용률은 올해 2월부터 8개월째 내리막을 걸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올해 3분기 제조업 노동자 수는 지난해보다 9만여 명 줄었다.

경기부양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는 증가세이긴 하지만,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주도 성장은 계속될까?

투자 부진 상황에서 수출 증가가 한국 경제 성장을 지탱해 왔다. 그러나 수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은 사상 최대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세다. 자동차, 선박,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들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수출은 신흥국 비중이 58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경제 악화의 영향은 크다.

게다가 2016년 중반부터 이어 온 반도체 호황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은 올해 1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 악화의 여파로 스마트폰 판매는 감소 추세이고, 컴퓨터 시장도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최근 한국 경제 성장이 주로 반도체 수출에 의존해 온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지면 그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구속해야 할 재벌 총수들과 '칵테일 파티'를 즐기던 문재인

2019년 예산안 — 노골적인 친기업 우향우와 국방비 증액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은 부자·기업 증세를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오히려 감세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향후 5년간 12조 6000억 원을 감세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 감세’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법인세 감세 등 대기업 감세도 포함됐다.

문재인은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대신 규제 ‘혁신’(완화·해제)과 경제 성장(자본 축적)은 여러 차례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경제 악화의 책임을 물어 경제부총리 김동연과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을 해임했다. 그러나 새 경제부총리 후보 홍남기는 박근혜 시절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지내며 규제 완화, 노동 개악 등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새 정책실장 후보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사회수석을 하며 핵발전소와 대학입시 문제 등에서 개혁을 배신한 데 책임이 있는 자다. 결국 새로운 경제 수장들의 임명도 친기업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실제로 2019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증가를 기록한 분야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이다(14.7퍼센트).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와 별 다를 바 없는 ‘혁신 성장’을 추구하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이다.

두번째(12.1퍼센트)로 많이 늘어난

보건·복지·고용 부문 예산도 실제로는 기업 지원책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고용장려금이 56.3퍼센트나 늘었는데,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전일제 노동자를 시간제로 전환하거나 유연근무제 도입을 해도 지급한다. 정부가 노동 유연화를 적극 권장한다.

반면, 정부가 직접 늘리겠다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월 100만 원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일자리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으로 고작 14억 원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보건 예산에서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법정 의무조항에 비해서도 2조 원 이상 부족하게 책정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사업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위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산업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 예산은 145퍼센트나 증가했다.

복지 지출은 증가했지만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의무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이고 실질적인 개선세는 미약하다.

그에 비해 국방비는 8.2퍼센트나 증가해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와 관련한 예산은 16.4퍼센트나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 예산은 기업 지원과 국방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반(反)노동 정책

결국 문재인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운운한 것은 노조 지도자들을 사회적 대화에 끌어들이려는 발목을 잡으려는 미사여구일 뿐인 듯하다.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들의 공격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기업주들과 우파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더 강력한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반값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국민연금 개악, 최저임금 추가가 개악 같은 임금 삭감 계획과 온갖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구조조정(실제로는 고용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도 더 강화될 듯하다. 한국개발연구

원 KDI는 ‘2018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해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번 예산안에서는 실업급여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이 26.7퍼센트 증가했다.

이런 때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미련을 갖는다면 정부의 개악에 들러리만 서 주는 꼴이 될 것이다. 투쟁의 태세와 준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작은 양보를 따내기 위해서도 단호한 투쟁과 연대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쌓여 가고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단결과 계급 투쟁의 전진을 도모할 혁명적 좌파의 구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진정한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까? 현장 조합원의 자주적 활동을 복돋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관점
김하영 지음, 책갈피, 456쪽, 16,000원

신간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
알렉스 캘리니코프·앨프 달링턴·
던컨 핼러스 지음, 이승민 옮김
책갈피, 192쪽, 10,000원

구글의 실체

여성 차별, 인종 차별, 조세 회피, 무기 개발 참여 ...

안형우

11월 1일 전 세계 20개국 구글 노동자 2만 명이 동맹 파업을 벌였다. 직장 내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성명서에 이렇게 썼다. “구글은 다양성과 포괄성이라는 말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체계적 인종차별 폐지, 평등 증진,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거의 없었다.”

안드로이드의 창시자 앤디 루빈은 구글 부사장이던 시절 부하 직원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했었다. 내부 조사 결과는 이 고발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숨겼다. 오히려 퇴사한 루빈에게 1024억 원이나 되는 퇴직 보상금을 지급했다.

구글 노동자들은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 사건이 보도됐다면 비슷한 사건 수천 건이 회사 각급 부서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한 여성은 동료 남성이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 다행히 소속 팀장이 발견해 더 못된 일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 여성은 사건을 인사팀에 알렸지만 침묵하라고 지시받았다. 오히려 인사는 이 여성을 탓했다. 임원들에게도 알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런 일은 흔하다. <뉴욕 타임스>



구글의 다양성 존중 운운은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이었을 뿐이다 11월 1일 파업한 미국 피츠버그 구글 노동자들

에 따르면 구글 최고 임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가해 혐의자들을 옹호했다. “좋은 사람이다”, “경솔한 행동으로 삶이 파괴되도록 해선 안 된다”, “경쟁업체에 기술이 넘어갈 수도 있다.”

사실 구글은 노동자들에게 엄격한 비밀 유지 계약을 맺게 해서, 노동자들이 겪은 차별을 드러내기 어렵게 만들어 왔다.

파업을 벌인 구글 노동자들은 이 밖에도 남녀 임금 격차, 파견 노동자 차별,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구글도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8일 구글은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 몇 가지를 받아들였다. 성적 괴롭힘과 성폭력 고발시 중재를 강요하지 않겠다. 관련 처분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녀 임금 격차 해소, 파견 노동자 차별 시정,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부도덕

구글이나 오라클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은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난해 구글의 전 세계 매출은 122조 원이 넘

었다. 한국 자회사인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최대 5조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를 200억 원밖에 내지 않았다.(매출이 비슷한 네이버는 4000억 원 넘게 냈다.)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글코리아 사장 존 리는 세금 포탈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사실 존 리는 가슴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옥시의 사장이었다. 구글은 이런 자를 한국 자회사 사장으로 앉힌 것이다.

구글은 8년 전 검열과 해킹 문제로 철수했던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하려 전

용 검색 엔진을 만들고 있다. 이 검색 엔진은 사용자를 추적하고 인권, 민주주의, 평화 시위, 언론 자유 같은 검색어를 사용하면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노동자 1400명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항의했다.

구글은 미국 국방부의 인공지능 활용 프로젝트에도 협력했다. 악명 높은 무인 폭격기(드론)의 성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구글 노동자 수천 명이 이에 항의했고 일부는 퇴사까지 했다. 결국 구글은 내년에는 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구글은 “악해지지 말자”를 사훈으로 삼은 일로 유명하다. 이 말은 직원 행동 지침의 맨 앞에 크게 강조돼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도 찼던 모양인지, 올해 슬그머니 직원 행동 지침 맨 밑에 작게만 남겨 놓았다.

참다 못해 집단 항의에 나선 노동자들의 행동은, 구글이 ‘다양성을 존중’ 운운하고 인권·성소수자 단체를 후원하는 것이 사실은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업 홍보 활동의 일환임을 드러냈다. 한국의 인권·성소수자 단체들이 이런 “이미지 세탁”의 파트너가 되선 곤란하다.

강박적 축적 경쟁이 핵심 동력인 자본주의 체제에 “선한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기업이 선해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구글 노동자들이 보여 준 것처럼 아래로부터의 행동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인권·성소수자 운동은 대기업 이미지 세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

글로벌 거대기업 구글은 2014년 퀴어문화축제 후원 기업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성소수자 단체 후원을 시작했다. 같은 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평등’의 설립금을 보냈다.

2017년부터는 ‘인권재단 사람’을 통해 성소수자 단체 후원을 체계화했다.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일환인 ‘무지개 인권 프로젝트 온’이라는 사업을 통해이다. 구글은 이 사업을 통해 해마다 5000만 원을 후원한다. 이 사업은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41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구글이 국내 성소수자 단체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와 관련 있다.

또, 2017년 팀 채트윈 구글 아시아 태평양지역 커뮤니케이션 총괄 이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과에도 도움 되니까.”

얼마 전 전 세계 구글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여성차별, 인종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증언은 구글 내부 현실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다. 구글이 다양성 존중 운운하고 성소수자 단체를 후원하는 것

은 이미지 세탁용이었을 뿐인 것이다.

인권·성소수자 운동이 이런 대기업 이미지 세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

물론 인권중심 사람 박래균 소장의 말처럼, 여러 인권단체가 “규모도 작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권활동가들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별받고 천대받는 성소수자들의 단체는 더욱 그럴 것이다. 후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소규모 단체들과 활동가들이 생계의 어려움 없이 활동하도록 하자는 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기업의 후원이 있으면 행사를 더 성대하게 치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은 정치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후원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 아니다. 그 돈의 출처와 암묵적 조건이 문제이다. 누구에게서 돈을 받느냐는 누구에게 책임을 질 것이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다.

국내 인권·성소수자 단체 중 구글 노동자 파업 소식을 전하며 구글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곳은 아직 안 보인다. 구글 내 여성·성소수자·유색인종 노동자에 대해서도 ‘인권 감수성’이 발휘돼야 하지 않을까? 구글 같은 세계적 대기업의 문화는 사회적 표준이 되기도 하는데 말이다.

한편, 인권재단 사람은 2017년에 하나은행의 후원을 받았다(《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 연간 보고서 2017》 35쪽). 하나은행은 구글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국내 시중은행 ‘빅4’에 드는 큰 자본주의 기업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초 여성 직원자를 고의로 탈락시킨 채용비리 문제가 드러났고, 박근혜 비리에 연루된 최순실·정유라에게 특혜 대출을 해 줬다.

기업 후원금에 익숙해질수록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과 동학에 대한 비판의식이 흐릿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권단체들의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선언은 빛이 바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본주의) 사회구조 감수성을 기르기를 바란다.

사회구조 감수성을 기르면, 1980년대 용어로 ‘야방’(친구)과 ‘타방’(적)을 구분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구글 등 자본주의 기업이 우리의 편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해야 한다. 그것은 그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어져야 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로도 이어져야 한다. 노동권이야말로 인권의 핵심 아닌가.

차승일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학교 | ☐ 기타)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wspaper.org

- ★ 안드로이드 앱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 ★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로 검색 (“신문”을 팔로우하셔야 합니다)
-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로 검색, 선택 후 Start 버튼
- ★ 트위터 @wspaper

온라인 구독 방법 한 눈에 보기 wspaper.org/online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박설

11월 5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올해 내에 탄력근로 확대 법 개악을 하기로 야합했다.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묵살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 잡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은 한국 자본주의 살리기, 기업주들의 이윤 지키기에 사활을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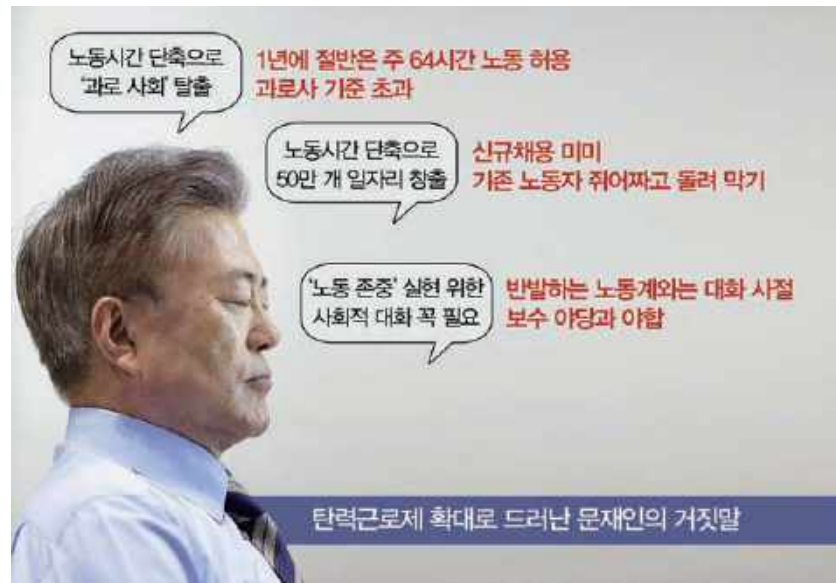
었다. 노동자들을 더 확실히 쥐어짜려고 최저임금을 개악한 데 이어 또 개악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려 한다. “2021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정부 계획은 몇 달 만에 내년 2월 추진으로, 다시 연내 개악으로 당겨졌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만난 여당과 보수 야당의 원내대표들은 11월 20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곧바로 “실천에 착수”하기로 했다. ‘문

지마 개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서둘러 재확인한 것이다. 이를 위한 실무 협의도 시작했다.

물론 경사노위에 합의 시한을 줬지만, 그것은 기만일 뿐이다. 탄력근로 확대라는 결론을 던져 주고 합의를 강요하는가 하면, 노동계가 반대해도 ‘우리 갈 길은 가겠다’니 말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꼴이 가증스럽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대화가 노동자들을 노동 개악의 들러리로 세우기 위한 술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최저임금에 이어 또, 쫓다 뺏기 공격

탄력근로 시간제는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제도다. 일감이 몰릴 때는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자들을 일 시킬 수 있다. 다른 날 노동시간을 좀 줄여서 법률상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의 평균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이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6개월~1년) 연장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1년에 절반을 주 64시간 노동에 내몰릴 수 있다. 연장 근무 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말이다. 탄력근로 확대가 임금 삭감 개악이기도 한 이유이다.

결국 문재인인의 “노동시간 단축” 약속은 요란한 말 잔치로 끝났다.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본격 시행도 하기 전에 무력화에 나섰다. 최저임금 ‘쫓다 뺏기’ 공격의 유사품이다.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고통은 이윤 논리에 밀려 외면 당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2위 최장시간 노동으로 눈 뜨면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지쳐 쓰러지기 바쁘다. 몸이 축 나고 삶이 피폐해져도 좀체 벗어날 수 없는 “죽도록 일하는 과로 사회”의 현실은 참담하다.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로만 늘려도 “합법 과로사”가 가능해진다(정의당 이정미 의원). 노동시간이 과로사 인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기 때

문이다. 노동자들이 만성괴로나 죽음에 내몰리든 말든 상관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치가 떨린다.

이번 개악 추진은 여러모로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잘 보여 준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지만, 이는 탄력근로 확대에 따른 ‘도로 장시간 노동’에 고사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로 내세웠던 “일·생활의 균형”도 공염불이 됐다.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면 가족을 돌보거나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기가 어려워진다. 임금이 깎여 생계의 불안정성도 커진다.

임금 깎고 노동강도 높이고 현장에서 쌓이는 불만

정부가 주 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한 수개월 동안, 이미 사용자들은 임금을 깎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교대제를 개악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관장하는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항만보안공사 측은 인력 총원도 없이 교대제를 개편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하기가 뻘세지고 휴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임금은 무려 20퍼센트나 깎였다. 안 그래도 임금 수준이 낮은 사업장인데다 최저임금을 받는 계약직도 공격을 당해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 7월 노사정 합의로 탄력근로제를 순차 도입하기 시작한 버스업계에서도 임금이 크게 삭감됐다.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 보전도 안 된 데다, 연장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 받으니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12조 8교대로 잘게 쪼개진 교대제 개

악에 고통받고 있다. 더 적어진 조별 인원으로 변변한 휴게시간도 없이 더 빠르게 일하고, 더 불안정한 교대 패턴으로 생활 리듬이 깨졌다. 심지어 사흘 연속 하루 12~13시간씩 근무해야 하는 이틀까지 생겼다.

유사 사례들이 금융·IT·제조·서비스 등 민간 부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경총은 아예 조선·건설업 등의 일부 업무나 방송·영화 제작에는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한다.

경총은 특히 노조와 합의 없이 개별 노동자 동의만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 고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도 자신의 정기 간행물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만이 아니라 “사업장 도입 절차(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단체협약이 잘 구비된 조직 노동자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완강하게 저지 투쟁에 나서야

이런 공격에 제동을 걸고 당면 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중 투쟁이 힘 있게 조직돼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여야정의 탄력근로 확대 개악 합의를 비판하며 11월 21일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한국노총과의 공동 대응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21일 실제 파업에 나서는 곳은 드물다. 실제 행동은 파업이라기보다 지

역별 총력 집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연내 개악 완성을 외치며 단호하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에서 11월 20일 이후 본격 법 개악 절차에 돌입하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대응해야 한다. 조직력을 총력 동원하는 실질적 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